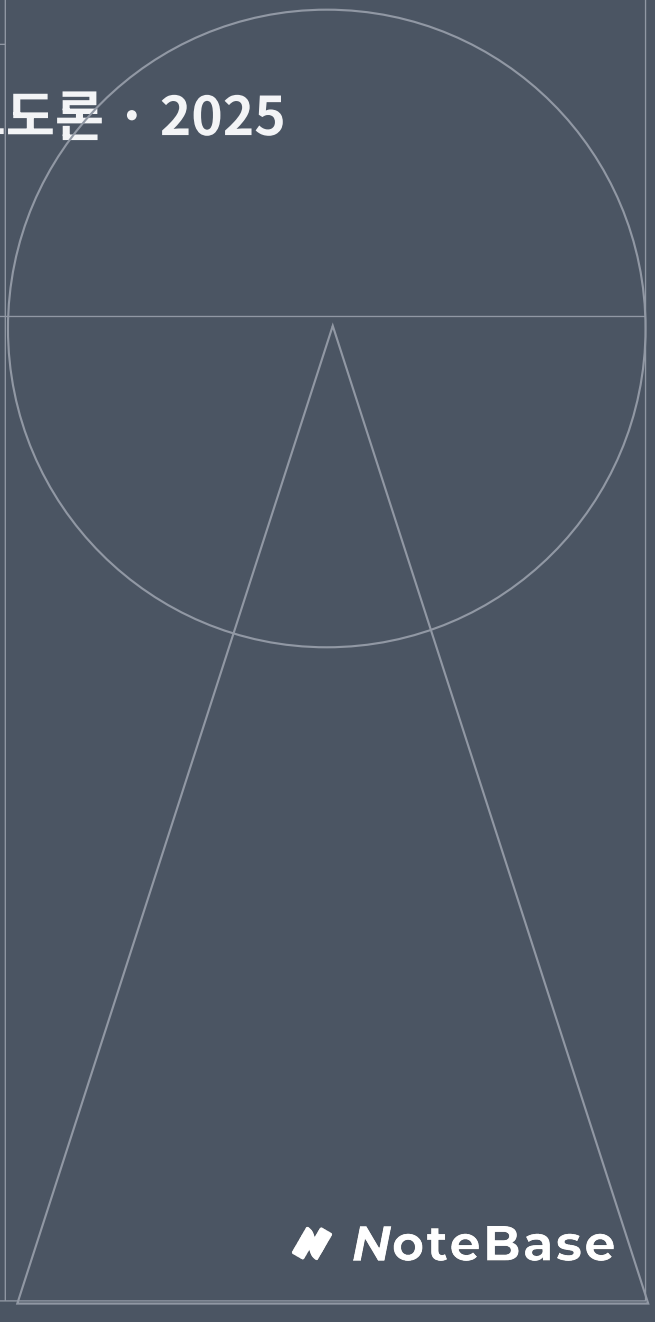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회직/9급 · 취재보도론 · 2025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회직/9급 · 취재보도론 · 2025

공무원/국회직/9급 · 취재보도론 · 2025

1. 보도의 '시의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뉴스의 보도 여부는 사건의 중요성에 따라 결정된다.

② 사건 발생 시점과 보도 시점의 간격이 짧을수록 뉴스 가치는 높아진다.

③ 보도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

④ 사건의 장소가 독자와 가까울수록 보도 가치가 높다.

⑤ 뉴스가 독자의 흥미를 유발해야 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보도의 여러 뉴스 가치 가운데 시의성이 뜻하는 바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시의성은 사건이 발생한 때와 보도되는 때의 시간적 간격이 짧을수록 뉴스 가치가 커지는 속성이다.
중요성은 사건의 영향력, 공공성은 공공의 이익, 근접성은 독자와 사건 사이의 거리, 흥미성은 독자의 관심을 끄는 정도에 관한 가치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사건의 중요성에 따라 결정된다'는 중요성에 관한 설명이다. 시의성은 사건 발생 시점과 보도 시점의 간격이 짧을수록 높아진다고 고쳐야 한다.
② O — 사건 발생 후 신속하게 보도할수록 정보의 새로움이 커지므로 시의성이 높아진다는 설명이다.
③ X — '공공의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는 공공성에 관한 설명이다. 시의성에 관해서는 발생한 사건을 때에 맞게 신속히 보도해야 한다고 고쳐야 한다.
④ X — '사건의 장소가 독자와 가까울수록'은 근접성에 관한 설명이다. 시의성은 공간적 거리가 아니라 사건 발생과 보도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짧을수록 높다고 고쳐야 한다.
⑤ X — '독자의 흥미를 유발해야 한다'는 흥미성에 관한 설명이다. 시의성은 독자의 흥미 여부가 아니라 정보가 얼마나 새롭고 제때 보도되는가에 관한 가치라고 고쳐야 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③·④·⑤도 일반적인 뉴스 가치나 보도 판단 기준을 설명하므로 그 자체만 보고 맞다고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문제는 뉴스 가치 전체가 아니라 '시의성'의 의미만 묻고 있으며, 시간적 간격을 직접 제시한 ②만 이에 해당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의 핵심 기준을 찾는다. 사건과 보도 사이의 시간·신속성·새로움을 말하면 시의성, 영향력을 말하면 중요성, 독자와의 거리를 말하면 근접성, 공익을 말하면 공공성, 관심 유발을 말하면 흥미성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시의성은 '얼마나 빨리', 근접성은 '얼마나 가까이', 중요성은 '얼마나 크게 영향을 주는가'이다.

NoteBase

2. 일반적인 스트레이트 기사 작성의 원칙과 그 응용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보 기 >

ㄱ. 요약형 리드는 사건의 전개 과정을 시간 순서에 따라 배치하며 서사적 흐름을 중시한다.

ㄴ. 역피라미드(inverted pyramid) 구조는 핵심 사실을 먼저 제시하고 부가 정보는 뒤에 배치하는 기사 구조이다.

ㄷ. 피처(feature) 기사는 감정 묘사나 문학적 장치를 활용하여 독자의 흥미나 정서를 환기하는 데 초점을 두기 때문에 사실이 아닌 내용이 포함될 수도 있다.

ㄹ. 나열형 리드는 연관된 주요 사실을 병렬적으로 제시하며 정보의 평등성을 강조하는 방식이다.

ㅁ. 스트레이트(straight) 기사에서의 리드는 독자의 감정 이입을 유도하는 서사적 도입보다 사실 중심의 전달을 중시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ㅁ

④ ㄴ, ㄷ

⑤ ㄷ, ㄹ, ㅁ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스트레이트 기사의 리드 유형과 기사 구조를 구별하고, 피처 기사의 표현 방식도 사실성의 원칙 안에서 이해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요약형 리드는 기사의 핵심 사실을 압축하여 제시하는 리드이다.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풀어 가는 것은 요약형 리드의 본질이 아니다.
역피라미드 구조는 가장 중요한 핵심 사실을 앞에 두고 세부 정보와 배경을 뒤에 배치하는 기사 구조이다.
피처 기사는 묘사와 서사적 표현으로 독자의 흥미와 정서를 환기할 수 있지만, 기사인 이상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
나열형 리드는 중요도가 비슷한 여러 사실을 병렬적으로 제시한다.
스트레이트 기사의 리드는 감정 이입을 유도하는 서사보다 사실을 빠르고 명료하게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둔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ㄱ과 ㄷ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ㄱ은 옳지 않지만 ㄴ은 옳다. ㄱ의 '시간 순서에 따라 배치하며 서사적 흐름을 중시한다'는 표현이 틀렸으며, 요약형 리드는 핵심 사실을 압축하여 제시한다고 고쳐야 한다. 따라서 옳지 않은 보기의 조합은 'ㄱ, ㄴ'이 아니라 'ㄱ, ㄷ'이다.
② O — ㄱ은 요약형 리드를 시간 순서의 서사형 리드처럼 설명하여 틀렸고, ㄷ은 피처 기사에 사실이 아닌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고 하여 틀렸다. 두 보기만 옳지 않으므로 정답 조합이다.
③ X — ㄱ은 옳지 않지만 ㅁ은 옳다. ㅁ처럼 스트레이트 기사의 리드는 독자의 감정 이입보다 사실 중심의 신속하고 명료한 전달을 중시한다. 따라서 'ㄱ, ㅁ'은 'ㄱ, ㄷ'으로 고쳐야 한다.
④ X — ㄷ은 옳지 않지만 ㄴ은 옳다. 역피라미드 구조는 핵심 사실을 먼저 제시하고 부가 정보를 뒤에 배치한다. 따라서 'ㄴ, ㄷ'은 'ㄱ, ㄷ'으로 고쳐야 한다.
⑤ X — ㄷ은 옳지 않지만 ㄹ과 ㅁ은 옳다. 나열형 리드는 중요도가 비슷한 사실을 병렬적으로 제시하고, 스트레이트 리드는 사실 전달을 중시한다. 따라서 'ㄷ, ㄹ, ㅁ'은 'ㄱ, ㄷ'으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ㄱ의 '시간 순서'와 '서사적 흐름'을 요약형 리드의 특징으로 착각하기 쉽다. 또한 피처 기사가 감정 묘사와 문학적 장치를 활용한다는 말과 사실이 아닌 내용을 허용한다는 말을 혼동하면 ㄷ을 놓치게 된다. 표현 방식이 서사적일 수 있다는 것과 사실성이 없어도 된다는 것은 전혀 다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리드 유형은 정보의 배열 기준으로 판단한다. 핵심 사실을 압축하면 요약형, 중요한 정보를 앞에 두면 역피라미드형, 비슷한 중요도의 사실을 병렬로 놓으면 나열형이다. 피처 기사도 기사이므로 표현은 다채로울 수 있어도 내용은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

암기 포인트

요약형은 핵심 압축, 역피라미드는 중요도 순, 나열형은 병렬 제시, 피처도 사실에 근거한다.

NoteBase

3. 피처 인터뷰(feature interview)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인물 그 자체의 이야기를 주로 다룬다.

② 인터뷰 장소가 그 인물의 집, 작업실, 연구실이라면 해당 공간에 대한 스케치가 한 부분을 차지할 수도 있다.

③ 외형적인 활동보다 인물의 이념, 주장, 기억, 상처, 꿈과 같은 내면 중심으로 질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인물에 대한 독자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것이 목적이므로 인물의 활동이나 생각에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된다.

⑤ 기사를 작성할 때 문답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기보다는 문답의 연결이 자연스럽도록 인터뷰 내용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피처 인터뷰가 인물의 삶과 내면을 입체적으로 전달하는 기사라는 점과, 취재 내용을 의미 있게 해석·구성하는 작성 원칙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피처 인터뷰는 사건 자체보다 특정 인물의 삶, 성격, 생각, 경험을 중심으로 독자의 흥미와 이해를 이끌어 내는 심층적 인물 기사이다. 인물의 말과 행동뿐 아니라 공간, 분위기, 내면적 동기 등을 함께 제시하고, 취재한 사실을 왜곡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의미와 맥락을 드러낸다.

선지별 해설

① O — 피처 인터뷰는 특정 사건의 단순 전달보다 인물 자체의 삶, 성격, 경험과 같은 이야기를 중심으로 다룬다.
② O — 인물의 집·작업실·연구실과 같은 인터뷰 장소는 그 사람의 생활과 개성을 보여 주는 배경이므로, 공간에 대한 스케치가 기사에 포함될 수 있다.
③ O — 외형적 활동의 나열에 그치지 않고 인물의 이념, 주장, 기억, 상처, 꿈 등 내면을 드러내는 질문을 하는 것이 인물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적절하다.
④ X — 틀린 표현은 '인물의 활동이나 생각에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이다. 피처 인터뷰는 독자의 흥미와 호기심을 충족시키면서 인물의 활동과 생각이 지닌 의미와 맥락을 드러낼 수 있다. 다만 사실을 벗어나 자의적으로 왜곡해서는 안 된다.
⑤ O — 인터뷰 내용을 문답 순서대로 그대로 옮기기보다 주제와 흐름에 따라 재구성하고 문단을 자연스럽게 연결해야 완성도 있는 기사가 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④는 ‘흥미와 호기심을 충족시킨다’는 앞부분 때문에 그럴듯해 보이지만, 뒤의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라는 절대적 표현이 잘못이다. 피처 인터뷰에서는 사실에 근거한 해석과 의미 부여가 가능하며, 금지되는 것은 근거 없는 왜곡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피처 인터뷰 선지는 ‘인물 중심성, 내면 탐색, 현장·공간 묘사, 의미와 맥락의 제시, 자연스러운 기사 재구성’에 부합하는지 판단한다. ‘의미를 부여하면 안 된다’처럼 피처 기사의 해석적 성격을 전면 부정하는 표현은 틀린 것으로 본다.

암기 포인트

피처 인터뷰는 인물을 중심으로 내면과 공간을 담고, 사실에 근거해 의미와 맥락을 구성하는 기사이다.

NoteBase

4. 언론의 보도 관행 및 취재원 인용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보 기 >

ㄱ. '브리핑(briefing)'은 비보도를 전제로 한 정보 제공 방식으로, 기자는 해당 내용을 취재의 단서로 삼는 것도 금지된다.

ㄴ. '오프 더 레코드(off the record)'는 보도에 직접 인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다른 취재원으로부터 확인되면 별도의 출처로 보도할 수 있다.

ㄷ. '엠바고(embargo)'는 보도 시점 이전까지 보도를 유예해달라는 합의로, 언론은 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

ㄹ. 인용 보도를 할 경우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처럼 출처를 일반화할 수 있으나, 독자의 신뢰를 위해 최대한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ㅁ. 기자는 취재원의 신원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그 정보가 공익성과 보도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익명 인용이 허용될 수도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ㅁ

④ ㄱ, ㄴ, ㅁ

⑤ ㄴ, ㄹ, ㅁ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브리핑, 오프 더 레코드, 엠바고의 의미와 출처 표기·익명 인용의 원칙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옳은 설명은 ㄴ, ㄹ, ㅁ이다.

NoteBase

핵심 개념

브리핑: 언론에 보도 가능한 정보를 공식적으로 설명·제공하는 취재 방식이다. 비보도를 전제로 하지 않으며, 기자는 브리핑 내용을 취재의 단서로 활용할 수 있다.
오프 더 레코드: 취재원과 기자의 합의에 따라 제공받은 내용을 직접 보도하지 않는 조건이다. 다만 같은 사실을 다른 취재원이나 독립적인 취재로 확인하면 별도의 출처에 근거해 보도할 수 있다.
엠바고: 특정 시점까지 보도를 미루기로 하는 취재원과 언론 사이의 합의이다. 통상 언론 윤리와 신뢰의 문제이지 그 자체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아니다.
출처 표기와 익명 인용: 출처는 독자가 정보의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취재원 보호가 필요하고 정보의 공익성과 보도 가치가 충분하면 익명 인용을 사용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X — ㄱ은 틀리고 ㄴ만 옳으므로 옳은 것만 고른 조합이 아니다. ㄱ의 '비보도를 전제로'와 '취재의 단서로 삼는 것도 금지된다'가 잘못되었다. 올바르게는 브리핑은 보도를 전제로 한 정보 제공 방식이고 취재의 단서로도 활용할 수 있으며, 정답 조합은 ㄴ·ㄹ·ㅁ이다.
② X — ㄱ과 ㄷ이 모두 틀린 설명이다. ㄷ의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잘못되었으며, 엠바고는 보도 시점을 늦추기로 한 합의로서 그 자체가 당연히 법적 의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올바른 조합은 ㄴ·ㄹ·ㅁ이다.
③ X — ㅁ은 옳지만 ㄷ이 틀렸으므로 옳은 것만 고른 조합이 아니다. 올바르게는 ㄷ을 제외하고 ㄴ과 ㄹ을 더한 ㄴ·ㄹ·ㅁ이 옳다.
④ X — ㄴ과 ㅁ은 옳지만 ㄱ이 틀리고, 옳은 ㄹ이 빠져 있다. 올바르게는 ㄱ을 제외하고 ㄹ을 포함한 ㄴ·ㄹ·ㅁ이다.
⑤ O — ㄴ은 오프 더 레코드 정보를 직접 보도하지 않더라도 독립적으로 확인한 사실은 별도 출처로 보도할 수 있다는 설명이고, ㄹ은 출처를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밝히는 원칙, ㅁ은 공익성과 보도 가치가 있을 때 취재원 보호를 위해 익명 인용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므로 모두 옳다.

오답 포인트

ㄱ은 브리핑을 비보도 조건인 오프 더 레코드와 뒤섞은 표현이다. ㄷ은 엠바고의 윤리적·직업적 구속을 곧바로 법적 의무라고 단정한 것이 함정이다. 또한 익명 인용은 무조건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취재원 보호의 필요성, 정보의 공익성, 보도 가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정보를 보도할 수 있는지와 언제 보도할 수 있는지를 먼저 나눈다. 브리핑은 공식 정보 제공, 오프 더 레코드는 제공 내용의 직접 보도 제한, 엠바고는 보도 시점의 유예이다. 출처 표기는 구체성이 원칙이고, 익명 인용은 취재원 보호와 공익성이 있을 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브리핑은 공개, 오프 더 레코드는 내용 비보도, 엠바고는 시점 유예이다. 출처는 구체적으로, 익명은 보호 필요성과 공익성이 있을 때 사용한다.

NoteBase

5. 취재·보도 관행으로서의 엠바고(embargo)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보 기 >

ㄱ. 본래 상선의 입항 금지나 수출 제한 등 조치를 취할 때 사용하는 통상 용어에서 유래했다.

ㄴ. 정보 제공자가 정보를 언론사나 기자에게 제공하면서 정해진 시점 이후에 보도할 것을 요청하는 '시한부 보도 유보'를 뜻한다.

ㄷ. 안보, 외교, 경제 등 국익이나 국민 안전과 관련한 사안에서 주로 활용되지만, 언론사의 업무 편의나 정부기관의 정보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도 있다.

ㄹ. 취재원과 언론 사이의 약속이므로, 언론사나 기자단이 엠바고 수용을 거부하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ㅁ. 엠바고를 수용한 뒤에 특정 언론사나 기자가 엠바고를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관련 법률에 의해 형사 처벌을 받는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ㄹ

④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엠바고의 유래와 의미, 활용 목적, 수용의 자율성, 위반 시 책임의 성격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엠바고는 정보 제공자와 언론이 일정한 시점까지 보도를 미루기로 합의하는 취재·보도상의 관행이다. 핵심은 '보도 시점의 유예'이며, 법률이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금지 명령과는 다르다. 안보·외교·경제·국민 안전과 관련된 사안에서 주로 활용되지만, 취재 편의나 정보 통제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ㄱ과 ㄴ은 옳지만, 옳은 ㄷ과 ㄹ이 빠져 있다. 올바르게는 ㄱ·ㄴ·ㄷ·ㄹ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② X — ㄱ과 ㄷ은 옳지만, 옳은 ㄴ과 ㄹ이 빠져 있다. 올바르게는 ㄱ·ㄴ·ㄷ·ㄹ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③ X — ㄴ·ㄷ·ㄹ은 옳지만, 옳은 ㄱ이 빠져 있다. 올바르게는 ㄱ·ㄴ·ㄷ·ㄹ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④ X — ㄷ과 ㄹ은 옳지만 ㅁ이 틀렸고, 옳은 ㄱ과 ㄴ도 빠져 있다. '엠바고를 어기면 관련 법률에 의해 형사 처벌을 받는다'는 표현은 틀리며, 올바르게는 엠바고 위반 자체만으로 당연히 형사처벌되는 것은 아니고 출입 제한이나 취재 협조 중단 등 언론계·취재 관행상의 제재가 문제될 수 있다고 해야 한다.
⑤ O — ㄱ은 엠바고가 본래 통상에서 입항 금지나 수출 제한 등의 조치를 가리키던 용어에서 유래했다는 설명이므로 옳다. ㄴ은 정보 제공자가 정해진 시점 이후의 보도를 요청하는 시한부 보도 유보의 의미를 정확히 설명하므로 옳다. ㄷ은 주요 활용 분야와 남용 가능성을 함께 설명하므로 옳다. ㄹ은 엠바고 수용이 취재원과 언론 사이의 약속에 기초하므로 언론사나 기자단이 원칙적으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이어서 옳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ㄱ·ㄴ·ㄷ·ㄹ이다.

오답 포인트

ㅁ의 '관련 법률에 의해 형사 처벌을 받는다'라는 단정이 함정이다. 엠바고는 원칙적으로 취재원과 언론 사이의 자율적 합의이므로, 이를 어겼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조합형 문항에서는 옳은 진술을 일부만 담은 ①~③도 정답이 될 수 없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엠바고 관련 선지는 '일정 시점까지 보도를 유예하는 합의'인지 먼저 확인한다. 그다음 법적 강제나 자동적인 형사처벌을 단정하면 틀린 진술로 판단하고, 안보·외교·경제·국민 안전 분야의 활용과 정보 통제 수단으로서의 남용 가능성은 함께 인정한다.

암기 포인트

엠바고는 보도 시점 유예의 약속이며, 위반 자체가 곧 형사처벌을 뜻하지 않는다.

NoteBase

6. 신문 기사와 달리 방송 기사를 작성할 때 기자가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방송 기사는 눈으로 읽지 않고 귀로 듣기 때문에 신문 기사보다 더 짧고 쉽게 써야 한다.

② 방송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이 시청하는 영향력이 큰 공적 매체이므로, 주관적 의견을 배제하고 객관적 사실을 보도해야 한다.

③ 앵커 멘트는 기사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거나 시청자의 호기심을 유발하되, 본문과의 중복을 가급적 피해야 한다.

④ 문어체가 아닌 구어체를 사용하므로 유행하는 신조어와 비속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⑤ 자막, 영상, 음악, CG 등의 효과를 적절히 살려 기사의 전달력을 높일 수 있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방송 기사의 매체적 특성과 그에 따른 문장 표현, 객관성, 앵커 멘트, 시청각 요소의 작성 원칙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방송 기사는 시청자가 한 번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짧고 쉬운 구어체로 작성하는 기사이다. 여기서 구어체란 말하듯 자연스럽고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뜻할 뿐, 유행어와 비속어를 제한 없이 사용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방송 보도는 객관성과 정확성을 지키면서 자막·영상·음악·CG 등의 시청각 요소를 적절히 결합해 전달력을 높인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방송 기사는 눈으로 되풀이해 읽는 신문 기사와 달리 귀로 한 번 듣고 이해해야 하므로 문장을 더 짧고 쉽게 써야 한다.
② O — 방송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지닌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 매체이므로 기자의 주관적 의견을 배제하고 객관적 사실을 중심으로 보도해야 한다.
③ O — 앵커 멘트는 기사의 핵심을 압축해 제시하거나 시청자의 관심을 끄는 역할을 하며, 본문을 그대로 되풀이하기보다 새로운 정보로 자연스럽게 연결해야 한다.
④ X — 틀린 표현은 '유행하는 신조어와 비속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이다. 구어체를 사용하더라도 시청자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표준적이고 품위 있는 표현을 써야 하며, 신조어와 비속어의 무분별한 사용은 피해야 한다.
⑤ O — 자막, 영상, 음악, CG 등은 방송의 시청각적 특성을 살리는 요소이므로 내용에 맞게 사용하면 정보의 이해도와 기사의 전달력을 높일 수 있다.

출제자가 노린 함정

④의 '구어체'라는 말 때문에 일상에서 쓰는 모든 표현이 허용된다고 판단하기 쉽다. 방송 기사의 구어체 원칙은 쉽게 들리고 자연스럽게 이해되는 문장을 쓰라는 뜻이며, 신조어와 비속어를 자유롭게 쓰라는 뜻이 아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방송 기사 작성 원칙은 '귀로 한 번에 이해되는 짧고 쉬운 문장', '객관적 사실 중심', '본문과 중복되지 않는 앵커 멘트', '적절한 시청각 요소'로 판단한다. 구어체를 이유로 비속어·유행어의 무제한 사용을 허용하는 선지는 틀린 것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방송 문장은 짧고 쉽게, 표현은 자연스럽되 정확하고 품위 있게 작성한다. 구어체는 비속어의 자유 사용이 아니다.

NoteBase

7. 다음 기사 문장 중 교열 대상이 아닌 것은?

① A씨의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최모씨를 최근 비공개 소환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②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제 논의 시작 단계로 아직 어떻게 하겠다고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③ 최근 20대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는 응답자의 60%가 "굳이 결혼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④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 여파로 23일 코스피 지수가 장중 3000선 아래로 떨어졌다.

⑤ 조사단 발표에 따르면 이번 폭발로 850가구가 파괴됐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기사 문장을 교열할 때 문장 성분의 호응, 인용·출처 표시 방식, 어휘의 의미 관계가 자연스러운지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교열은 기사 문장의 문법, 어휘, 표현과 논리적 호응을 점검하여 독자가 뜻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바로잡는 작업이다. 특히 조사와 서술어의 호응, '따르면'과 '말했다'의 인용 구조, 행위의 대상과 서술어가 의미상 맞는지를 확인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 '최모씨를 최근 비공개 소환 조사한'은 부사어와 동작의 연결이 어색하다. '최모씨를 최근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처럼 고쳐야 한다. 따라서 교열 대상이다.

② X — '군 관계자에 따르면'으로 출처를 제시하고 뒤에서 다시 '말했다'고 서술하여 인용 구조가 맞지 않는다. '군 관계자는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또는 '군 관계자에 따르면, …결정된 것은 없다'로 고쳐야 한다. 따라서 교열 대상이다.

③ X — '설문조사 결과는'이라는 주제어가 뒤의 '응답자의 60%가 … 답했다'와 자연스럽게 호응하지 않는다. '최근 20대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0%가 "굳이 결혼하지 않겠다"고 답했다'로 고쳐야 한다. 따라서 교열 대상이다.

④ O —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 여파로'라는 원인 부사어와 '코스피 지수가 … 떨어졌다'라는 주어·서술어가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23일', '장중', '3000선 아래로'의 위치와 결합도 적절하므로 제시된 문장 자체는 교열 대상이 아니다.

⑤ X — '가구'는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의 단위이므로 물리적으로 '파괴됐다'고 표현하기 어렵다. '이번 폭발로 주택 850채가 파괴됐다' 또는 '이번 폭발로 850가구가 피해를 입었다'로 고쳐야 한다. 따라서 교열 대상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②·③은 대략적인 뜻이 통한다는 이유로 지나치기 쉽다. 그러나 교열에서는 뜻의 전달 여부만이 아니라 부사어의 연결, 출처 제시와 인용 서술의 일관성, 조사와 서술어의 호응까지 살펴야 한다. ⑤의 '850가구'도 수치가 구체적이어서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가구'와 '파괴되다'의 의미 관계가 맞지 않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주어·목적어·부사어가 서술어와 문법적·의미적으로 호응하는지 확인한다. 이어 '~에 따르면'과 '~고 말했다'가 한 문장에 중복되거나 충돌하는지, 사람·가구·건물처럼 서로 다른 대상을 나타내는 단위가 서술어와 맞는지 점검한다.

암기 포인트

교열의 핵심은 호응, 인용 구조, 의미 관계이다. '따르면-말했다'의 중복과 '가구가 파괴됐다' 같은 대상·서술어 불일치를 잡아낸다.

NoteBase

8. 재난 보도에서 기자가 지켜야 할 윤리적 태도와 보도 지침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보 기 >

ㄱ. 긴급한 재난 현장에서 사망자나 실종자의 명단은 경찰 등 수사기관의 발표 이전에도 내부 제보를 통해 가능한 한 신속히 확보하여 보도하는 것이 원칙이다.

ㄴ. 보도 경쟁을 이유로 현장 기자에게 과도한 취재 부담을 주어 정확성이나 사실 확인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ㄷ. 재난 상황의 긴급성을 감안하여 피해자가 SNS에 공개한 글이나 사진은 취재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출처 없이 보도해도 된다.

ㄹ. 다수의 목격자가 유사한 내용을 진술하는 경우에는, 다소 자극적인 유언비어라 하더라도 알권리를 위해 뉴스에 반영할 수 있다.

ㅁ. 언론의 역할 중에는 취재와 보도 이외에도 방재와 복구기능도 있음을 유념해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ㄴ, ㅁ

④ ㄷ, ㄹ

⑤ ㄴ, ㄹ, ㅁ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재난 보도에서 신속성과 경쟁보다 정확성, 피해자 보호, 출처 명시, 검증, 방재·복구 기여를 우선해야 한다는 원칙을 묻는 문제이다.

NoteBase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국회직/9급 · 취재보도론 · 2025

핵심 개념

재난 보도 윤리: 재난 정보를 빠르게 전달하되 사실 확인과 피해자 보호를 지키고, 불확실한 정보·유언비어·사생활 침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보도 원칙이다.
ㄱ X: 내부 제보만으로 사망자·실종자 명단을 먼저 보도하는 것은 원칙이 아니다. 신원을 충분히 확인하고 유가족 통보 여부와 사생활 보호 등을 고려해야 한다.
ㄴ O: 보도 경쟁이 정확성과 사실 확인보다 앞설 수 없으며, 현장 기자에게 무리한 취재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
ㄷ X: 피해자가 SNS에 공개한 글이나 사진이라는 이유만으로 취재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 게시자의 공개 범위와 사용 동의를 확인하고 출처도 밝혀야 한다.
ㄹ X: 여러 목격자의 진술이 비슷하더라도 자극적인 유언비어를 그대로 뉴스에 반영할 수 없다. 교차 검증하고 확인된 사실과 미확인 정보를 구분해야 한다.
ㅁ O: 언론은 취재와 보도뿐 아니라 방재와 복구에도 관심을 두어 재난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해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 ㄴ은 옳지만 ㄱ은 틀리다. 내부 제보만으로 사망자·실종자 명단을 수사기관 발표 전에 보도하는 것은 피해자 보호와 신원 확인 원칙에 어긋난다. ㄱ을 제외하고 ㅁ을 포함한 'ㄴ, ㅁ'으로 고쳐야 한다.
② X — ㄴ은 옳지만 ㄷ은 틀리다. SNS 공개는 보도 목적의 사용 허가를 뜻하지 않으며 출처 없는 보도도 허용되지 않는다. ㄷ을 제외하고 ㅁ을 포함한 'ㄴ, ㅁ'으로 고쳐야 한다.
③ O — ㄴ은 정확성과 사실 확인을 보도 경쟁보다 우선하는 원칙이고, ㅁ은 언론이 방재와 복구를 통해 피해 최소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원칙이므로 둘 다 옳다.
④ X — ㄷ과 ㄹ은 모두 틀리다. SNS 공개물을 허가받은 자료로 간주해서는 안 되고, 여러 진술이 비슷해도 유언비어는 검증 없이 반영할 수 없다. 올바른 조합은 'ㄴ, ㅁ'이다.
⑤ X — ㄴ과 ㅁ은 옳지만 ㄹ은 틀리다. 유언비어는 다수의 유사한 진술이 있더라도 사실 확인과 교차 검증을 거쳐야 한다. ㄹ을 제외한 'ㄴ, ㅁ'으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재난의 긴급성을 '검증 생략'이나 '사용 동의 추정'의 근거로 오해하기 쉽다. 특히 ㄱ의 '발표 이전에도', ㄷ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와 '출처 없이', ㄹ의 '유언비어라도 반영'이 원칙을 뒤집는 표현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재난 보도 선지에서 신속성·경쟁·알권리가 정확성, 검증, 출처 명시, 사생활·피해자 보호를 약화시키는 근거로 쓰였으면 틀린 진술로 판단한다. 방재와 복구를 통해 피해를 줄이는 언론의 공적 역할은 옳은 진술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재난 보도는 '빨리'보다 '확인', '공개됨'보다 '동의와 출처', '자극'보다 '피해 최소화'가 우선이다.

NoteBase

9. 탐사 보도(investigative reporting)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장기간의 취재를 통해 숨겨진 사실을 밝혀내거나 심층적 분석을 하는 보도이다.

② 권력기관의 부정이나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바로잡아 더 나은 사회로 변화시키는 성격을 띠는 경우가 많다.

③ 정확성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사건이나 문제를 신속하게 전달하여 대중에게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④ 관계자의 제보나 인터뷰, 내부 문건 발굴과 분석, 정보공개 청구, 빅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취재 기법이 활용된다.

⑤ 공익을 위한 보도라 하더라도 취재 대상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고 반론권을 보장하는 등 취재 윤리에 유의해야 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탐사 보도의 핵심 특징인 장기·심층 취재, 공익성, 다양한 취재 기법, 정확성, 취재 윤리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탐사 보도는 권력이나 사회 구조 속에 감추어진 중요한 사실을 장기간 독자적으로 추적하고 검증하여 공익을 실현하는 심층 보도이다. 속보가 신속한 전달을 중시한다면, 탐사 보도는 충분한 취재와 교차 검증을 통한 정확성과 심층성을 중시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탐사 보도는 장기간 취재하여 숨겨진 사실을 밝혀내고 사건의 원인과 구조를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② O — 권력기관의 부정이나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드러내 공론화함으로써 제도와 사회의 변화를 촉진하는 공익적 성격이 강하다.
③ X — 틀린 표현은 '정확성이 다소 떨어지더라도'와 '신속하게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이다. 탐사 보도는 속보 경쟁보다 충분한 자료 수집과 사실 확인, 교차 검증을 통한 정확성과 심층성을 우선한다.
④ O — 제보와 인터뷰뿐 아니라 내부 문건의 발굴·분석, 정보공개 청구, 데이터 분석 등 여러 취재 기법을 활용한다.
⑤ O — 공익적 목적이 있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취재 대상자에게 해명과 반론의 기회를 보장하는 등 취재 윤리를 지켜야 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③은 탐사 보도의 '대중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린다'는 기능을 속보의 신속성과 혼동하게 만든다. 탐사 보도에서도 공개는 중요하지만, 정확성을 희생한 신속성이 최우선 가치가 되지는 않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에 장기 추적, 숨겨진 사실의 발굴, 구조적 원인 분석, 공익성, 다양한 자료 취재와 검증이 제시되면 탐사 보도의 특징으로 판단한다. 반대로 정확성을 희생한 신속한 전달을 최우선으로 제시하면 속보의 특성을 섞은 잘못된 설명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탐사 보도는 '빨리'보다 '깊이, 정확하게, 공익을 위해'이다.

NoteBase

10. 가짜 뉴스(fake news)와 팩트 체크(fact-checking)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팩트 체크는 보도 전 사전 검증을 포함하며, 뉴스 생산 전반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절차이다.

② 가짜 뉴스는 명확한 정의라기보다는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용어로 남용되며, 종종 언론의 정당한 보도까지도 부정하는 수단으로 쓰이기도 한다.

③ 팩트 체크 기관은 객관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당, 기업, 정부 등으로부터 독립된 편집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④ 팩트 체크는 단순한 사실 확인을 넘어 사실 왜곡이 초래한 사회적 영향까지 분석하는 확장된 저널리즘 행위로 본다.

⑤ 가짜 뉴스는 일반적으로 의도적 허위 정보와 사실 기반의 풍자를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정의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팩트 체크를 일반적인 보도 전 검증과 구별하고, 가짜 뉴스 및 팩트 체크의 범위와 성격을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팩트 체크: 이미 공개된 주장이나 보도의 사실성을 근거에 따라 검증하고 판정하는 저널리즘 활동이다. 핵심 키워드는 공개된 주장에 대한 사후 검증이다.
보도 전 사실 검증: 기자와 언론사가 기사 작성·편집 과정에서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일상적인 취재 절차이다.
가짜 뉴스: 통상 의도적으로 조작된 허위 정보뿐 아니라 사실을 바탕으로 하더라도 맥락을 왜곡하거나 오도하는 정보까지 폭넓게 논의되는 개념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보도 전 사전 검증을 포함하며, 뉴스 생산 전반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절차'라는 부분이 틀리다. 이는 일반적인 취재·보도의 사실 검증 절차에 가깝다. 팩트 체크는 통상 이미 공개된 주장이나 보도의 진위를 사후에 검증하고 판정하는 독립된 저널리즘 활동을 뜻한다.
② O — 가짜 뉴스는 하나로 합의된 명확한 정의가 없고 정치적으로 남용되기도 하며, 자신에게 불리한 정당한 보도를 부정하는 표현으로 쓰이기도 한다.
③ O — 팩트 체크 기관이 정당·기업·정부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독립된 편집 구조를 갖추는 것은 검증 결과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조건이다.
④ O — 팩트 체크는 명제의 진위만 판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허위·왜곡 정보가 형성·유통되어 사회에 미치는 영향까지 분석하는 확장된 저널리즘 활동으로 볼 수 있다.
⑤ O — 가짜 뉴스는 의도적으로 만든 허위 정보뿐 아니라 사실 일부를 이용하면서 맥락을 비틀거나 과장해 오해를 일으키는 사실 기반의 왜곡 정보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오답 포인트

①의 '사전 검증'은 언론 보도의 정확성을 높이는 중요한 활동이지만, 이 문항에서 말하는 팩트 체크와 동일한 개념은 아니다. 사전 검증이라는 익숙한 표현 때문에 팩트 체크의 전형적인 사후 검증 성격을 놓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기사 생산 과정에서 취재 내용을 미리 확인하는 활동이면 보도 전 사실 검증으로, 이미 공개된 주장이나 보도의 진위를 근거와 함께 판정하는 활동이면 팩트 체크로 구분한다. 가짜 뉴스는 단순한 완전 허위뿐 아니라 맥락 왜곡·과장·오도까지 포함하는 넓은 용례가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사전 확인은 보도 검증, 공개 주장에 대한 사후 판정은 팩트 체크이다.

NoteBase

11. 언론 보도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게이트키핑 이론(Gatekeeping Theory)은 뉴스 소비자의 선택과 취향이 뉴스 유통의 결정 요인이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② 프레이밍 이론(Framing Theory)은 기자가 가치 판단을 배제하고 중립적인 틀에서 뉴스를 구성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③ 침묵의 나선 이론(Spiral of Silence Theory)은 사회적 합의 형성이 개인의 의견 표현을 더 촉진시킨다고 본다.

④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은 개인이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고 인지 균형을 이루려는 성향을 의미한다.

⑤ 의제설정 이론(Agenda-Setting Theory)은 언론이 특정 사안을 반복적으로 강조할수록 수용자들이 그 사안을 중요하게 인식하게 된다고 본다.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언론 보도 이론과 인지 편향의 핵심 정의를 구별하고, 각 선지의 설명이 해당 개념에 맞는지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게이트키핑 이론: 기자·편집자 등 게이트키퍼가 수많은 정보 가운데 보도할 내용을 선택·배제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프레이밍 이론: 언론이 현실의 특정 측면을 선택하고 강조하는 방식이 수용자의 사건 해석에 영향을 준다고 본다.
침묵의 나선 이론: 자신의 의견이 소수라고 느낀 사람이 고립을 두려워해 의견 표명을 삼가면서 지배적 의견이 더 강해지는 현상을 설명한다.
확증편향: 자신의 기존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를 선호하고 반대 정보는 덜 받아들이는 인지적 성향이다.
의제설정 이론: 언론이 특정 사안을 반복적·비중 있게 보도하면 수용자가 그 사안을 중요한 의제로 인식하게 된다고 본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표현은 '뉴스 소비자의 선택과 취향이 뉴스 유통의 결정 요인이 된다'이다. 게이트키핑 이론은 기자·편집자 등 게이트키퍼가 어떤 정보를 뉴스로 선택하거나 배제하는지를 강조한다.

② X
틀린 표현은 '기자가 가치 판단을 배제하고 중립적인 틀에서 뉴스를 구성한다'이다. 프레이밍 이론은 기자와 언론이 현실의 특정 측면을 선택·강조하여 뉴스의 해석 틀을 구성한다고 본다.

③ X
틀린 표현은 '사회적 합의 형성이 개인의 의견 표현을 더 촉진시킨다'이다. 침묵의 나선 이론에서는 자신의 의견이 소수라고 인식한 개인이 사회적 고립을 우려해 의견 표명을 줄이며, 그 결과 지배적 의견이 더욱 강해진다.

④ X
틀린 표현은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고 인지 균형을 이루려는 성향'이다. 확증편향은 기존 신념에 부합하는 정보를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그에 반하는 정보는 무시하거나 낮게 평가하는 성향이다.

⑤ O
언론이 특정 사안을 반복적이고 두드러지게 보도할수록 수용자는 그 사안을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게 된다는 설명은 의제설정 이론의 핵심과 일치한다.

오답 포인트

①은 뉴스 '소비자'의 선택을 게이트키핑과 바꾸어 놓았고, ②는 프레이밍을 가치 판단이 없는 중립적 구성으로 뒤집었다. ③은 침묵의 나선에서 나타나는 의견 표명의 위축을 촉진으로 바꾸었으며, ④는 확증편향을 오히려 균형적 사고처럼 서술했다. ⑤의 '반복적으로 강조'와 '중요하게 인식'의 연결이 정답을 가르는 핵심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뉴스의 선택·배제는 게이트키핑, 현실을 해석하는 틀의 구성은 프레이밍, 소수 의견의 위축은 침묵의 나선, 기존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의 선호는 확증편향, 언론 보도의 강조가 사안의 중요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의제설정으로 구별한다.

암기 포인트

게이트키핑은 무엇을 보도할지, 프레이밍은 어떻게 보이게 할지, 의제설정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할지에 관한 이론이다. 침묵의 나선은 소수 의견의 침묵, 확증편향은 믿고 싶은 정보의 선택이다.

NoteBase

12. 페니 프레스(penny pres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9세기 초 미국에서 도시 노동자 계급을 타깃으로 등장한 저렴한 가격의 대중신문을 말한다.

② 노동자 계급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정치적 주장을 펼치는 진보 성향의 신문이었다.

③ 범죄와 성적 추문 등 선정적인 사건을 중점적으로 기사화하였다.

④ 독자의 주목을 끌기 위해 큰 활자의 헤드라인이나 삽화 등 시각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⑤ 재원 확보의 수단으로 광고를 게재한 상업 신문이었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페니 프레스가 정당의 정치적 기관지가 아니라 판매와 광고를 기반으로 대중 독자를 확보한 상업 신문이었다는 점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페니 프레스는 19세기 전반 미국에서 1페니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며 도시의 대중 독자를 겨냥한 상업적 대중신문이다. 정당의 후원과 정치적 주장에 의존하던 기존 정파신문과 달리, 판매 부수와 광고 수입을 중시하고 범죄·성적 추문·소문 등 흥미 중심의 기사를 적극적으로 다루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페니 프레스는 19세기 전반 미국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어 도시 노동자를 포함한 대중 독자층을 넓힌 신문이다.

② X
- 틀린 표현은 '노동자 계급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정치적 주장을 펼치는 진보 성향의 신문'이다.
- 실제로 페니 프레스는 특정 정당이나 노동자 계급의 정치적 기관지가 아니라, 폭넓은 대중을 독자로 삼아 판매와 광고 수입을 추구한 상업적 대중신문이다.

③ O
- 많은 독자의 흥미를 끌기 위해 범죄, 성적 추문, 소문과 같은 선정적인 사건을 주요 기사로 다루었다.

④ O
- 독자의 시선을 끌고 판매를 늘리기 위해 큰 활자의 헤드라인과 삽화 같은 시각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⑤ O
- 정당 후원보다 대량 판매와 광고 수입을 중시했으므로 광고를 중요한 재원 확보 수단으로 활용한 상업 신문에 해당한다.

오답 포인트

도시 노동자도 주요 독자였다는 사실을 노동자 계급의 정치적 이해를 대변했다는 뜻으로 확대하면 ②를 맞는 설명으로 오인하기 쉽다. '누가 읽었는가'와 '어떤 정치 세력을 대변했는가'는 서로 다른 판단 기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페니 프레스의 선지는 저가 판매, 대중 독자, 선정적 기사, 큰 헤드라인·삽화, 광고 수입이라는 특징에 맞는지 확인한다. 특정 정당이나 계급의 정치적 대변지라고 규정하면 정파신문의 성격을 섞은 것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페니 프레스는 '1페니·대중·선정성·광고'이며, 노동자 계급의 정치적 기관지가 아니다.

NoteBase

13. 해외 언론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BBC: 영국의 공영 방송이자 세계 최초의 공영방송사로, 수신료를 재원 삼아 운영된다.

② CNN: 미국의 24시간 보도 전문 케이블 채널로, 미디어 재벌 루퍼트 머독이 창립자이다. 걸프 전쟁 당시 바그다드 실시간 생중계를 계기로 급성장했다.

③ 뉴욕타임스: 미국의 일간신문으로, 1970년대 워터게이트 특종 보도로 유명하다. 2013년 아마존 CEO 제프 베이조스에 의해 인수되었다.

④ 르몽드: 프랑스의 일간신문으로, 국제 뉴스에 강하며 중도 우파/보수 성향으로 유명하다.

⑤ 알자지라: 사우디아라비아에 본사를 둔 위성 방송사로, 비서구적 시각의 국제 뉴스로 유명하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주요 해외 언론사의 국가, 매체 성격, 설립자·소유 관계, 정치적 성향을 정확히 연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BBC는 영국의 공영방송사, CNN은 미국의 24시간 뉴스 전문 케이블 채널, 뉴욕타임스는 미국의 일간신문, 르몽드는 프랑스의 일간신문, 알자지라는 카타르에 본사를 둔 위성 뉴스 방송사이다. 언론사를 구별할 때는 국가·매체 유형·설립자 또는 소유주·정치적 성향을 한 묶음으로 확인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BBC는 영국의 대표적인 공영방송사이며, 수신료를 주요 재원으로 운영되어 온 방송사이다. 따라서 제시된 설명은 옳다.

② X — 틀린 부분은 '미디어 재벌 루퍼트 머독이 창립자'라는 표현이다. CNN은 테드 터너가 창립했으며, 걸프 전쟁 당시 바그다드 현지의 실시간 보도로 국제적 인지도가 크게 높아졌다.

③ X — 틀린 부분은 '2013년 아마존 CEO 제프 베이조스에 의해 인수되었다'라는 표현이다. 제프 베이조스가 2013년에 인수한 신문은 뉴욕타임스가 아니라 워싱턴포스트이다. 뉴욕타임스는 뉴욕타임스 컴퍼니가 발행한다.

④ X — 틀린 부분은 르몽드를 '중도 우파·보수 성향'으로 규정한 표현이다. 르몽드는 일반적으로 중도 좌파 성향의 프랑스 일간신문으로 분류된다.

⑤ X — 틀린 부분은 '사우디아라비아에 본사'라는 표현이다. 알자지라는 카타르 도하에 본사를 둔 위성 뉴스 방송사이며, 비서구적 관점의 국제 뉴스 보도로 알려져 있다.

오답 포인트

②는 CNN의 걸프 전쟁 보도라는 맞는 정보에 창립자를 루퍼트 머독으로 바꾸어 넣었고, ③은 제프 베이조스의 워싱턴포스트 인수 사실을 뉴욕타임스와 뒤바꾸었다. ④와 ⑤도 각각 정치적 성향과 본사 소재지만 바꾼 선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언론사 문제는 '국가·매체·인물·성향'을 분리해 대조한다. 특히 CNN–테드 터너, 워싱턴포스트–제프 베이조스, 르몽드–중도 좌파, 알자지라–카타르의 연결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BBC–영국 공영방송, CNN–테드 터너, 베이조스–워싱턴포스트, 르몽드–중도 좌파, 알자지라–카타르이다.

NoteBase

14. 언론 보도에서의 초상권 침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적 인물이라 하더라도 사생활 영역에서의 촬영은 초상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

② 공익을 위한 보도라 하더라도 얼굴이 명확히 식별 가능한 피해자 사진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피해야 한다.

③ 집회 현장에서의 군중 촬영은 원칙적으로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④ 초상권 침해는 명예훼손과 달리 허위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 여부가 판단된다.

⑤ 초등학생들의 행사 장면은 학교장의 동의만 있으면 촬영하거나 보도할 수 있다.

정답 5번

쟁점

이 문제는 언론 보도에서 초상권 침해가 성립하는 범위와 촬영·보도가 허용되는 경우에 관한 문제이다. 핵심은 공적 관심과 보도의 필요성이 있더라도 촬영 대상, 장소, 식별 가능성, 동의의 주체와 범위, 보도 방법을 구체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점이다.

용어 풀이

초상권 = 누구나 자신의 얼굴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함부로 촬영·공표당하거나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이다.

핵심 구분

초상권은 헌법상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바탕으로 보호된다. 동의 없는 촬영·공표 또는 동의 범위를 벗어난 이용은 원칙적으로 초상권을 침해할 수 있다. 다만 공공의 이해와 관련된 보도에서는 보도의 공익성·필요성·긴급성·방법의 상당성과 피해 정도 등을 비교하여 위법성을 판단한다. 공적 인물이라도 사생활 영역까지 보호를 잃는 것은 아니며, 명예훼손과 달리 사진이나 보도 내용이 진실하다는 이유만으로 초상권 침해가 배제되지 않는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공적 인물은 공적 활동에 관하여 촬영·보도의 허용 범위가 넓을 수 있지만, 사생활 영역까지 당연히 공개되는 것은 아니다. 사생활을 부당하게 촬영하거나 공표하면 초상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

② O
- 얼굴이 명확하여 피해자가 특정되는 사진은 피해자의 사생활과 인격권을 추가로 침해할 위험이 크다. 피해자의 동의나 얼굴 비식별 처리 등 정당한 사유와 보호조치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사용을 피해야 한다.

③ O
- 공개된 집회에서 특정 개인을 부각하지 않고 집회의 규모와 현장 상황을 보여 주는 군중 장면은 집회 보도의 공익성과 현장성 때문에 원칙적으로 개별 동의 없이 촬영할 수 있다. 다만 특정 참가자의 얼굴을 근접 촬영하여 식별되게 보도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초상권 판단이 필요하다.

④ O
- 초상권은 얼굴 등 식별 가능한 모습을 함부로 촬영·공표하지 못하게 하는 권리이므로 보도 내용의 진실·허위가 성립의 필수 기준이 아니다. 사실인 사진이라도 동의 없이 촬영·공표하거나 동의 범위를 벗어나 사용하면 침해가 될 수 있다.

⑤ X
- 학교장은 학생 개개인의 초상권을 대신하여 포괄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므로 학교장의 동의만으로 식별 가능한 초등학생을 촬영·보도할 수 없다.
- 틀린 표현: 학교장의 동의만 있으면 촬영하거나 보도할 수 있다.
- 올바른 표현: 식별 가능한 초등학생을 촬영·보도하려면 학교장의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며, 원칙적으로 학생과 법정대리인의 적절한 동의를 받고 촬영 목적·공표 범위도 지켜야 한다.

오답 포인트

③의 집회 군중 촬영과 ⑤의 초등학생 촬영을 모두 '행사 주최 측의 허락' 문제로 보면 틀리기 쉽다. 집회 전체를 담는 군중 장면은 공적 현장 보도의 성격이 강하지만, 미성년 학생의 초상권은 학교장의 허락만으로 대신할 수 없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촬영·보도 문항에서는 먼저 인물이 식별되는지 확인하고, 그다음 공적 현장인지 사생활 영역인지, 개인을 부각했는지 군중 전체를 담았는지, 권리자의 동의가 있는지, 동의한 목적과 실제 이용 범위가 일치하는지를 차례로 판단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공인은 사생활까지 공개되는 사람이 아니며, 학교장은 학생 초상권의 대리 동의자가 아니다.

NoteBase

1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기관은 보유·관리 중인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따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

②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권리와 행정에 대한 국민 참여를 보장하는 수단이다.

③ 18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오면 원칙적으로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⑤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정답 3번

쟁점

이 문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상 정보공개의 목적과 원칙, 청구권자, 공개 여부 결정기간 및 비공개 대상 정보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은 정보공개 청구권에 연령 제한이 있는지를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정보공개청구권은 국민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핵심 구분

정보공개법 제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 청구권을 인정하므로 18세 이상이라는 연령 제한은 없다.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공개 여부는 원칙적으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정보공개법이 정한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국민에게는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은 법정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청구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② O
- 정보공개제도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다.

③ X
- 정보공개법은 18세 이상 성인으로 청구권자를 제한하지 않고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 청구권을 인정한다.
- 틀린 표현: '18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 올바른 표현: '연령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은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④ O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법이 정한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O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법정 비공개 대상 정보이므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오답 포인트

③의 '18세 이상 성인'이라는 표현이 함정이다. 정보공개 청구권의 주체는 성인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며, 법은 연령 요건을 두지 않는다. 또한 ④의 10일은 실제 공개 완료기간이 아니라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원칙적 기간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정보공개법 문항에서는 먼저 주체·기간·원칙과 예외를 나누어 본다. 청구권자는 '모든 국민', 공개 여부 결정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정보는 '공개가 원칙이고 법정 사유가 있으면 비공개 가능'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모든 국민이 청구하고,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며, 공개가 원칙이고 비공개는 예외이다.

NoteBase

16.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정정보도 청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정정보도 청구가 가능하려면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이 있어야 한다.

②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

③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해당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④ 「민사소송법」상 당사자 능력이 없는 기관 또는 단체라도 하나의 생활단위를 구성하고 보도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대표자가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보도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언론보도가 있은 후 6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1번

쟁점

이 문제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가 정한 정정보도 청구의 실체적 요건, 청구 주체 및 청구기간에 관한 문제이다. 핵심은 보도 내용의 허위성과 피해는 필요하지만 언론사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정정보도 청구 =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않아 피해를 입은 자가 그 잘못된 보도 내용을 바로잡는 보도를 요구하는 제도이다.

핵심 구분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않아 피해를 입어야 한다. 그러나 제2항에 따라 언론사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은 청구 요건이 아니다. 청구기간은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이고, 보도가 있은 후 6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제3항과 제4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대표 청구와 당사자능력 없는 기관·단체 대표자의 청구도 일정 요건 아래 인정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제14조 제2항은 정정보도 청구에 언론사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따라서 이 선지는 정정보도 청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을 제시한다.
- 틀린 표현: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이 있어야 한다.
- 올바른 표현: 언론사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이 없어도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② O
- 제14조 제1항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않아 피해를 입은 자에게 그 보도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 청구권을 인정한다.

③ O
- 제14조 제3항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해당 업무에 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해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④ O
- 제14조 제4항에 따라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는 기관 또는 단체라도 하나의 생활단위를 구성하고 보도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그 대표자가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⑤ O
- 제14조 제1항에 따라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다만 보도가 있은 후 6개월이 지나면,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청구할 수 없다.

오답 포인트

①의 정정보도 청구 요건을 일반적인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요건과 혼동하기 쉽다. 정정보도 청구에서는 허위의 사실적 주장으로 인한 피해가 핵심이며, 언론사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까지 요구하지 않는다. 또한 ⑤의 3개월은 주관적 기간이고 6개월은 보도 시점부터 계산하는 최종 한계라는 점을 함께 구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정정보도 청구 문항에서는 먼저 보도가 사실적 주장인지, 내용이 진실하지 않은지, 그로 인한 피해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이어 고의·과실과 위법성은 불필요하다는 점, 안 날부터 3개월과 보도 후 6개월이라는 두 기간, 기관·단체 대표자의 청구 가능성을 차례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허위 사실보도와 피해는 필요, 고의·과실과 위법성은 불필요, 기간은 안 날부터 3개월·보도 후 6개월이다.

NoteBase

17.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려고 한다. A후보 지지율이 41%, B 후보 지지율이 39%이며 표본오차가 95% 신뢰수준에서 ±3% 인 경우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기사는?

① A후보 41%, B후보 39%로 A후보가 B후보보다 근소하게 우세했다.

② 오차범위 내에서 A후보가 41%로 1위, B후보가 39%로 2위를 차지했다.

③ A후보 41%, B후보 39%로 A후보가 2% 차이로 이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④ A후보 41%, B후보 39%로 두 후보는 오차 범위 내에 경합하고 있다.

⑤ A후보 41%, B후보 39%로 A후보가 B후보보다 2%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여론조사의 후보별 지지율 차이와 표본오차를 함께 읽고, 통계적 불확실성을 과장하지 않는 보도 문구를 고르는 문제이다.

자료 읽는 순서

1. A후보 41%, B후보 39%이므로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2%포인트임을 확인한다.
2. 표본오차가 95% 신뢰수준에서 ±3%포인트이므로 이 격차가 오차범위 안에 있음을 확인한다.
3. 우세·승리·확정 순위처럼 차이를 단정하는 표현을 피하고 '오차범위 내 경합'으로 표현한다.

핵심 근거

A후보의 지지율 범위는 38~44%, B후보의 지지율 범위는 36~42%로 볼 수 있으며 두 범위는 겹친다. 따라서 조사 결과만으로 A후보의 우세나 두 후보의 순위를 확정할 수 없고, 두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경합한다고 보도하는 것이 적절하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A후보가 B후보보다 근소하게 우세했다’는 표현은 2%포인트의 격차를 실제 우세로 단정한다. 올바르게는 ‘두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경합했다’고 표현한다.
② X — ‘1위, 2위를 차지했다’는 표현은 오차범위 안의 점추정치 차이로 순위를 확정한다. 올바르게는 확정 순위를 매기지 않고 ‘A후보 41%, B후보 39%로 오차범위 내 경합’이라고 표현한다.
③ X — ‘A후보가 2% 차이로 이기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표현은 2%포인트의 표본 지지율 격차를 승리로 해석한다. 올바르게는 ‘두 후보의 격차는 2%포인트이며 오차범위 안에 있다’고 표현한다.
④ O — A후보 41%, B후보 39%의 격차는 2%포인트로 주어진 표본오차 ±3%포인트 안에 있으므로 ‘두 후보는 오차범위 내에 경합하고 있다’는 표현이 적절하다.
⑤ X — ‘A후보가 B후보보다 2%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표현은 오차범위를 제시하지 않아 점추정치의 차이를 확정적 격차처럼 보이게 한다. 또한 비율의 차이는 ‘2%’가 아니라 ‘2%포인트’라고 해야 한다. 올바르게는 ‘A후보가 2%포인트 앞서지만 두 후보는 오차범위 내에서 경합한다’고 표현한다.

오답 포인트

41%와 39%만 빼서 A후보가 앞선다고 단정하는 것이 함정이다. 조사에서 나타난 2%포인트의 점추정치 차이보다 표본오차를 함께 고려해야 하며, 오차범위 안의 차이로 우세·승리·확정 순위를 보도해서는 안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후보 간 지지율 격차와 제시된 표본오차를 먼저 비교한다. 격차가 오차범위 안이면 우세나 순위를 단정하지 않고 ‘오차범위 내 경합’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지지율 격차가 표본오차 안이면 ‘승리’가 아니라 ‘경합’이다.

NoteBase

18. 다음 기사 제목 중 밑줄 친 부분의 어법이나 맞춤법이 옳은 것은?

① “제 노래 어떻게 변했는지 한꺼번에 들려 드릴께요”
② “김성태 작 ‘산 넘어 저쪽’ 등 3편”
③ “시청자 사로잡은 애끊는 연기”
④ “싯가 총액 무시” 투신 반발
⑤ 검찰 ‘양자 진술 틀리다’ 기소 안 해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기사 제목에 쓰인 말의 형태와 의미를 구별하여 어법과 맞춤법에 맞는 표현을 찾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ㄹ게요’는 말하는 사람의 의지나 약속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로, ‘-ㄹ께요’가 아니라 ‘-ㄹ게요’로 적는다. ‘너머’는 일정한 경계의 저쪽을 뜻하는 명사이고, ‘넘어’는 동사 ‘넘다’의 활용형이다. ‘애끓다’는 몹시 답답하거나 안타까워 속이 끓는 듯하다는 뜻이므로 관형형은 ‘애끓는’이다. ‘시가’는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뜻하며, 서로 같지 않다는 뜻에는 ‘다르다’를 쓴다.

선지별 해설

① X — ‘드릴께요’가 잘못되었다. 의지나 약속을 나타내는 어미는 ‘-ㄹ게요’이므로 ‘드릴게요’로 고쳐야 한다.
② X — ‘산 넘어 저쪽’의 ‘넘어’가 잘못되었다. 산이라는 경계의 저쪽을 뜻하는 명사 ‘너머’를 써서 ‘산 너머 저쪽’으로 고쳐야 한다.
③ O — ‘애끓는’은 동사 ‘애끓다’의 올바른 관형형이다. 안타깝고 절절한 감정을 드러내는 연기를 뜻하므로 문맥과 표기 모두 적절하다.
④ X — ‘싯가’가 잘못되었다.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은 ‘시가’이므로 ‘시가 총액’으로 고쳐야 한다.
⑤ X — ‘양자 진술 틀리다’의 ‘틀리다’가 잘못되었다. 두 진술이 서로 같지 않다는 의미이므로 ‘양자의 진술이 다르다’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②에서는 소리가 같은 ‘너머’와 ‘넘어’를, ⑤에서는 일상에서 자주 혼용되는 ‘다르다’와 ‘틀리다’를 혼동하기 쉽다. 또한 ①의 ‘-ㄹ게요’를 된소리로 발음하더라도 표기는 ‘-ㄹ께요’가 되지 않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경계의 저쪽이라는 장소를 가리키면 ‘너머’, 동작으로 넘는다는 뜻이면 ‘넘어’를 쓴다. 서로 같지 않으면 ‘다르다’, 정답이나 기준에 맞지 않으면 ‘틀리다’를 쓴다. 의지·약속의 종결 어미는 발음과 관계없이 ‘-ㄹ게요’로 적는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약속은 '-ㄹ게요', 경계 저쪽은 '너머', 서로 같지 않으면 '다르다', 시장 가격은 '시가', 안타까움은 '애끓다'이다.

19. 포털사이트, 소셜미디어 등 디지털 뉴스 플랫폼의 활용의 일상화가 뉴스 생산과 이용에 미친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용자의 클릭을 유도하기 위한 선정적 제목과 내용의 기사가 많아지면서 뉴스 콘텐츠의 질이 전반적으로 저하되었다.

② 플랫폼의 알고리즘이 이용자의 관심과 취향에 맞춰 추천한 뉴스를 소비하는 경향이 늘어났다.

③ 신문이나 방송을 직접 소비하거나 언론사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이용자가 현저히 줄어들면서 언론사의 수익이 감소했다.

④ 포털사이트를 통해 뉴스 이용자에게 콘텐츠를 손쉽게 노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포털 입점을 노리는 소규모 언론사가 난립하는 일이 벌어졌다.

⑤ 플랫폼의 엄격한 관리를 통해 검증된 뉴스가 유통됨에 따라 허위 조작 정보가 감소하고 뉴스의 신뢰도가 향상되었다.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디지털 뉴스 플랫폼의 일상화가 뉴스의 생산·유통·소비 방식과 언론사의 수익 구조에 가져온 변화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디지털 뉴스 플랫폼은 포털사이트와 소셜미디어처럼 뉴스를 모아 배열·추천하고 이용자에게 유통하는 매개 공간이다. 이용 편의성과 맞춤형 소비는 커졌지만, 클릭 경쟁에 따른 선정성, 확증편향과 필터 버블, 언론사의 플랫폼 의존, 허위·조작 정보의 확산 같은 문제도 함께 나타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클릭 수와 주목을 확보하려는 경쟁은 선정적인 제목과 내용의 기사, 이른바 클릭 유도형 기사를 늘려 뉴스 품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
② O — 플랫폼 알고리즘은 이용자의 과거 이용 기록과 관심·취향을 바탕으로 뉴스를 추천하므로, 이용자가 자신이 선호하는 관점의 뉴스를 반복적으로 소비하는 경향이 커질 수 있다.
③ O — 이용자가 언론사 홈페이지나 신문·방송을 직접 이용하지 않고 플랫폼에서 뉴스를 소비하면, 언론사의 독자 접점과 광고·구독 기반이 약화되어 수익이 감소할 수 있다.
④ O — 포털 노출이 뉴스 이용자 유입에 큰 영향을 주면서 포털 입점을 목표로 하는 소규모 언론사가 난립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⑤ X — 틀린 표현은 '플랫폼의 엄격한 관리를 통해' 허위·조작 정보가 감소하고 뉴스 신뢰도가 향상되었다는 부분이다. 실제로는 플랫폼을 통한 빠르고 광범위한 유통으로 허위·조작 정보가 확산될 위험이 커지고, 그 결과 뉴스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오답 포인트

⑤는 플랫폼이 콘텐츠를 관리한다는 일부 기능을 전체적인 결과로 확대해 '허위·조작 정보 감소'와 '신뢰도 향상'으로 단정한 것이 함정이다. 디지털 플랫폼의 개방성·확산성은 검증되지 않은 정보도 빠르게 퍼뜨릴 수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플랫폼의 영향은 편의성과 개인화라는 장점, 클릭 경쟁·편향 강화·언론사 의존·허위정보 확산이라는 부작용으로 나누어 판단한다. '엄격한 관리로 허위정보가 감소하고 신뢰도가 향상되었다'처럼 부작용이 해소되었다고 단정하는 표현은 우선 의심한다.

암기 포인트

플랫폼 뉴스는 맞춤 추천과 접근성은 높이지만, 클릭 경쟁·필터 버블·수익 종속·허위정보 확산 위험도 키운다.

NoteBase

20. 다음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뉴스 제작에 활용한 사례이다. 각 사례에서 한국기자협회의 '언론을 위한 생성형 인공지능 준칙'을 기준으로 할 때 적절한 판단을 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보 기 >

ㄱ. 기자 A는 생성형 AI가 작성한 기사 원고를 사실 확인 없이 그대로 송고하면서 기사의 출처에 "AI가 작성함"을 명시했다.

ㄴ. 언론사 B는 생성형 AI가 요약한 기사 초안이 내용과 맥락에 적절한지 사람이 검토한 뒤 보도에 활용했다.

ㄷ. 기자 C는 생성형 AI로 생성한 유명인의 합성 이미지를 보도에 사용하면서, 해당 이미지가 실제가 아님을 설명했다.

ㄹ. 언론사 D는 생성형 AI로 작성한 기사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를 신속히 수정한 뒤 오류 사실을 기사에 고지했다.

ㅁ. 언론사 E는 생성형 AI가 자동 작성한 기사 초안을 내부 검증 없이 그대로 활용하면서 기사 말미에 AI 사용 사실은 분명하게 공개했다.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ㄷ, ㅁ
⑤ ㄴ, ㄹ, ㅁ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생성형 인공지능을 뉴스 제작에 활용할 때 사실 확인, 인간의 감독, 투명한 공개, 오류의 신속한 수정, 인격권 보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원칙은 AI가 만든 결과를 그대로 신뢰하지 않고 언론인이 정확성과 맥락을 검토하여 최종 책임을 지는 기준이다. AI 사용 사실의 공개는 투명성을 높이는 조치이지만, 사실 확인이나 내부 검증을 생략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또한 실제 인물을 합성한 이미지에는 허위 인상을 줄 위험과 인격권 침해 가능성이 있으므로 단순히 합성물임을 표시하는 것만으로 사용이 정당화되지 않는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ㄴ은 적절하지만 ㄱ이 부적절하다. ㄱ의 '사실 확인 없이 그대로 송고'가 틀린 표현이다. 올바르게는 AI 작성 원고라도 기자가 사실과 출처를 확인하고 필요한 편집을 거친 뒤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ㄱ, ㄴ이 아니라 ㄴ, ㄹ이 적절하다.
② O — ㄴ은 사람이 기사 초안의 내용과 맥락을 검토했으므로 인간의 감독과 편집 책임에 부합한다. ㄹ도 오류를 인지한 뒤 신속히 수정하고 오류 사실을 독자에게 알렸으므로 정확성·책임성·투명성 원칙에 부합한다.
③ X — ㄹ은 적절하지만 ㄷ이 부적절하다. ㄷ의 '유명인의 합성 이미지를 보도에 사용'한 부분은 합성 사실을 설명했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실제 인물의 허위 이미지가 오인이나 인격권 침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사용을 피하거나, 공익상 필요성과 권리 침해 여부를 엄격히 검토해야 한다. 따라서 ㄷ, ㄹ이 아니라 ㄴ, ㄹ이 적절하다.
④ X — ㄱ, ㄷ, ㅁ은 모두 부적절하다. ㄱ은 사실 확인을 생략했고, ㄷ은 실제 인물의 합성 이미지가 낳는 오인·인격권 문제를 충분히 해소하지 못했으며, ㅁ은 내부 검증을 생략했다. 올바르게는 사실 확인과 사람의 검토를 거치고, 합성 이미지의 권리 침해와 오인 가능성을 점검해야 한다. 적절한 사례는 ㄴ, ㄹ이다.
⑤ X — ㄴ과 ㄹ은 적절하지만 ㅁ이 부적절하다. ㅁ의 '내부 검증 없이 그대로 활용'이 틀린 표현이다. 올바르게는 기사 말미에 AI 사용 사실을 공개하는 것과 별도로, 기사 초안을 내부에서 검증하고 편집 책임을 다해야 한다. 따라서 ㄴ, ㄹ, ㅁ이 아니라 ㄴ, ㄹ만 적절하다.

오답 포인트

ㄱ과 ㅁ은 AI 사용 사실을 공개했다는 점 때문에 적절해 보이지만, 공개는 사실 확인과 내부 검증을 대신하지 못한다. ㄷ 역시 합성 사실을 설명했더라도 실제 유명인의 합성 이미지를 사용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오인과 인격권 침해 문제가 남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사례에서 공개 여부만 보지 않고 ① 사람이 사실과 맥락을 검토했는지, ② 오류를 신속히 수정하고 알렸는지, ③ 실제 인물의 권리 침해나 독자 오인 가능성을 통제했는지를 차례로 판단한다. 사실 확인 또는 내부 검증을 생략했다는 표현이 있으면 부적절한 사례로 본다.

암기 포인트

AI 뉴스의 핵심은 공개만이 아니라 '사람의 검증과 최종 책임'이다.

NoteBase